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

2014년 6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sli.org www.facebook.com/ksiedit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 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 기준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경영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워낙 많고 이들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얘기해 왔다. 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이 절반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체와 사내하청업체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정부와 대기업이 어떠한 노동정책 방향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3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19만 명(12.0%)이고,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605만 명(88.0%)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14.3%인데 5인 미만 사업체는 78.4%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표1>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자수(비율)

	수(천명)			구성(%)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751	2,730	3,481	4.1	15.0	19.1	78.4
5-9인	1,302	1,901	3,203	7.1	10.4	17.6	59.4
10-29인	2,248	1,759	4,007	12.3	9.6	22.0	43.9
30-99인	2,371	1,249	3,620	13.0	6.8	19.8	34.5
100-299인	1,325	414	1,739	7.3	2.3	9.5	23.8
300인이상	1,877	313	2,190	10.3	1.7	12.0	14.3
전규모	9,874	8,366	18,240	54.1	45.9	100.0	45.9
100인미만	6,672	7,639	14,311	36.6	41.9	78.5	5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 원자료.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서 2012년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619만 명(38.9%)이고, 정부부문 노동자는 210만 명(13.2%)이다. (중복을 제외한) 정부부문과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모두 696만 명(43.7%)이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이 700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이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2> 2012년 기업규모와 조직형태별 노동자 수(비율)

		전체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정부	비법인 단체	개인 기업체
수 (천명)	전규모	15,913	9,123	1,906	2,095	410	2,380
	1~4인	1,450	436	36	6	67	905
	5~9인	1,384	645	56	16	171	496
	10~49인	3,211	2,005	228	132	154	692
	50~99인	1,558	908	151	349	5	145
	100~299인	2,118	1,400	340	263	6	108
	300~999인	1,875	1,184	305	363	3	20
	1,000명이상	4,317	2,543	790	966	5	14
비율 (%)	전규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인	9.1	4.8	1.9	0.3	16.3	38.0
	5~9인	8.7	7.1	2.9	0.8	41.7	20.8
	10~49인	20.2	22.0	12.0	6.3	37.6	29.1
	50~99인	9.8	10.0	7.9	16.7	1.2	6.1
	100~299인	13.3	15.3	17.8	12.6	1.5	4.5
	300~999인	11.8	13.0	16.0	17.3	0.7	0.8
	1000명이상	27.1	27.9	41.4	46.1	1.2	0.6

자료: 통계청, 「2012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보고서」, 2014.3

흔히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기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현실 진단이 달라지고 정책적 함의와 처방이 달라진다.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 기준으로는 대기업 소속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경영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워낙 많고 이들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얘기해 왔다. 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이 절반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체와 사내하청업체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정부와 대기업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통계는 대부분 사업체 기준으로 생산되어 왔다. 앞으로 기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노동통계를 함께 생산하여 착시(錯視)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올바른 현실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